

5년 내 신차 판매 절반 친환경차로 바뀐다...283만대 보급

산업부,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확정

10년 안에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내연기관차 수준 전기·수소차 성능 확보

2025년 친환경차 83만대 수출...비중 35%

정부가 2025년까지 연간 신차 판매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2030년에는 이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 포럼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1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의 24%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목표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대수는 2025년 283만대, 2030년 785만대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해야 한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된다. 또한 택시·트럭·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인센티브는 확대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 폭이 넓어진다.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를 10% 개선하고, 2030년에는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중전 인프라 구축은 친환경차 도입 확산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충전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집중 설치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가격을 2025년까지 1000만원가량 낮추기 위한 정책 지원도 지속된다.

전용 플랫폼, 국산·소재 국산화 등에 대한 R&D가 이뤄지고 올해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계 협력 연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새로 시작되는 배터리 리스 사업을 통해 초기 구매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택시·트럭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수소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전기차는 2025년까지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전비도 kWh당 6.5km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kg당 400Wh)도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 이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배터리 무게 40%가량 가볍기 때문에 전비 개선에도 용이하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 탄소중립을 접목한 생태계 전환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산업 관련 기업으로 바꿀 계획이다.

완성차와 1·2차 부품사 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사슬 윈-윈' 제도를 도입하고,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뉴딜펀드, 사업 재편 전용



R&D 등도 마련된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용 플랫폼 개발,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연기관차 수출 강국에서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8만대 수준인 친환경차 수출 대수를 2025년까지 83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면 전체 수출 차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가 된다.

내년부터는 수소광역버스도 출시된다. 2023년에는 수소트램이 상용화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휴대폰처럼 상시 생활 충전이 가능해지고 1회 충전으로 전국 어디든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소차는 교통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내구성은 2배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올해 말까지 먹는샘물 페트병 20% 이상 상표띠 제거

'재활용 최우수' 부여...EPR분담금 최대 50% ↓



먹는샘물 제조업체 10곳이 올해 말까지 전체 생산량의 20% 이상을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출시한다. 생산량으로 따지면 2만 이상이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 10곳과 이 같은 내용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 등이다. 이들의 먹는샘물 생산량 점유율은 74%에 달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4일 시행된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고시는 소포장제품의 상표띠 제거, 날개제품 병마개에 상표띠 부착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10곳은 올해 상반기 내에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 우선 묶음 포장용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향후 개별 포장까지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는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시중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만 4000t의 20% 수준이다.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유인책을 마련

하기로 했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을 대상으로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상표띠 미사용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뜨는 상표띠 사용 ▲접착제를 0.5% 미만으로 도포하고 물에 뜨는 상표띠 사용 시에만 해당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표면에 해당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 업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감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용기를 얇게 만들고, 내부에 공기 대신에 질소를 충전하는 방식이 연구 중이다.

한정에 환경부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라며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맵퍼스,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앱 '아틀란 트럭' 출시

차체가 높고 긴 화물차의 특성 고려한 기능 대거 탑재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가 높이제한·좁은길 회피경로 등 대형차 길 안내에 특화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아틀란 트럭'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틀란 트럭 앱은 국내에서 유일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으로 일반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높고 긴 화물차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대형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길을 피하는 맞춤형 경로를 기본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능이 강화됐다.

맵퍼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SW를 출시, 베타서비스로 화물차 경로를 제공해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장에서 검증 받은 화물차 데이터와 기술, 서비스 노하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화물차 유료 앱을 선보이게 됐다.

아틀란 트럭 앱은 ▲높이·중량 설정에 따른 맞춤 경로 ▲좁은길·유턴 회피 경로 ▲통행제한시간·위험물 적재 등 법적 제재를 고려한 경로 ▲화물차 우대 주유소 및 서비스센터 전용 검색 ▲주행정보와 운전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운전 점수 ▲연비 절감을 위한 예코길 안내 등을 제공한다.

맵퍼스는 아틀란 트럭을 통해 화물차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고속·급감속·연속운전시간 등 화물차 운행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감소와 화물차 관련 다양한 도로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틀란 트럭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월 이용료는 3600원이다. 앱 출시를 기념해 오는 3월까지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한다. 4월부터는 구독 시 첫 달 무료 체험기간이 제공된다. 아틀란 앱에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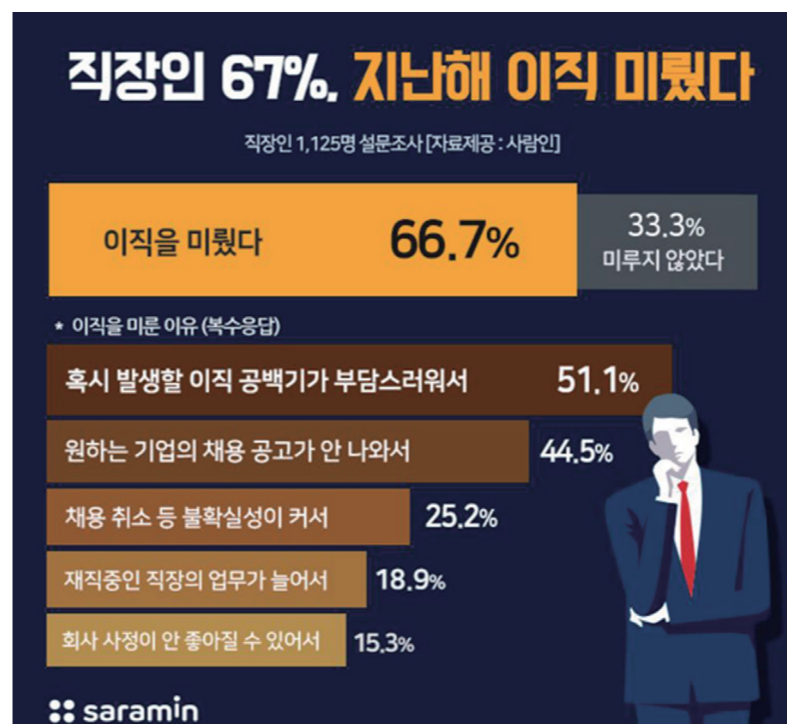
원하던 화물차 베타서비스는 3월 말 종료 예정이다.

맵퍼스 김명준 대표는 "아틀란 트럭 내비 개발을 위해 고가·교량의 높이 제한, 중량제한, 차선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의 상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그간 검증된 아틀란 트럭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유료 앱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이직 의향' 직장인 67% "지난해 이직 미뤘다"

이직 공백기 부담·원하는 채용 공고 안나와서 등 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지난해 직장인들의 이직 시도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직을 미룬 이유는 '혹시 발생할 이직 공백기가 부담스러워서'(51.1%,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원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안 나와서'(44.5%), '채용 취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서'(25.2%), '재직중인 직장의 업무가 늘어서'(18.9%), '이직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15.3%) 등의 순이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68.4%), 중견기업(63.9%), 대기업(60.9%) 재직자 순으로 이직을 미룬 비율이 높았다.

이직을 미룬 것이 직장 생활에도, 직급별로는 대리급(74.1%), 사원급(67.2%), 과장급(64.2%), 임원급(52.2%), 부장급(50%) 순으로,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이 높은 직장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을 미룬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이직을 미룬 이유는 '혹시 발생할 이직 공백기가 부담스러워서'(51.1%,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원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안 나와서'(44.5%), '채용 취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서'(25.2%), '재직중인 직장의 업무가 늘어서'(18.9%), '이직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15.3%) 등의 순이었다.

이직을 미룬 것이 직장 생활에 미친 영향은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일하게 됨'(46.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직장

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짐'(33.7%), '현 직장에서 만족스러운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됨'(28.9%), '직장보다 외부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됨'(17.5%), 기존 업무에 더욱 매진하게 됨'(13.2%) 등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다.

지난해 이직을 미룬 직장인들 중 대다수인 90.8%는 올해 이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직을 시도할 시점은 구체적으로 '1분기'(37.3%), '2분기'(26.9%), '3분기'(19.5%), '4분기'(16.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올해 이직 성공률은 평균 58.5%로 집계돼 높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이직을 미루지 않은 직장인들(375명)은 그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도저히 더 버틸 수 없어서'(42.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들었다. 이밖에 '원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나와서'(25.9%), '코로나와 무관하거나 호재인 업종으로 이직할 것이어서'(17.1%), '폐업 위기 등 재직중인 직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13.3%), '좋은 포지션을 제안받아서'(12.3%) 등이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들은 이직을 위해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채용 공고 탐색'(65.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이력서, 자소서 등 업데이트'(46.4%), '자격증 취득 준비'(29.2%), '취업포털에 이력서 공개'(18.8%), '영어 등 공인 외국어 시험 준비'(13.9%), '포트폴리오 정리'(12.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뉴스스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구글·애플 등 앱마켓 갑질 경험"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꼴로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업체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10월~올해 1월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가 가운데 37.8%가 앱마켓으로부터

앱 등록 거부, 심사 지연, 삭제 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 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별로는 애플 앱스토어 58.0%, 구글 플레이스토어 58.0%, 애플 앱스토어 58.0%, 윈도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 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계입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과거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 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